

## 노벨과학상, 일본이 중국을 압도하는 이유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 - 30] 2017년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들어서면 올해도 세계적 관심은 연례행사인 노벨상 뉴스에 쏠릴 겁니다.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세 분야에 걸친 과학상을 필두로 문학상, 평화상, 그리고 경제학상의 순서로 수상자가 결정되고 12월초 시상으로 막을 내립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거행되는 평화상 시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노벨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여되고요. 각 분야 모두 의미가 남다르지만, 절반에 달하는 과학상은 국가 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21세기 들어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국적 통계를 보면, 미국이 55명으로 1위, 일본은 16명 2위, 그리고 영국이 14명 3위로 나타납니다.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단 1명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명도 없습니다. 물론 150년 전 메이지 유신 때부터 본격적인 서양문물 유입과 과학 진흥책에 힘써온 일본과 30년전 만 하더라도 신흥개도국이었던 중국(또는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지요. 그렇더라도 중국은 개발연구투자(R&D) 규모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고 인구도 일본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中日의 격차는 왜 생길까요. 정치체제, 경제·교육 시스템 등 제도적 차이 못지않게 국민의식과 문화적 요인 때문일 듯합니다.

순수과학과 노벨과학상의 생명은 '독창성'입니다. 중국 위조제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계 피해가 年8조원을 넘는다는 최근 국내언론의 충격 보도는 중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베끼기 대국'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미국 트럼프정부의 對中 압박 카드가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짜퉁 차이나'의 오명을 씻기 전에는 진정한 과학강국 되기는 어렵겠지요. 작년도 노벨상 테이프를 끊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나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혁하길 원했다”라며 창의성을 강조한 것과 대조됩니다.

‘정직성’과 질서·규칙·신뢰를 지키는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과학 분야, 특히 수학을 포함한 기초과학은 자연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정직한 학문이기 때문이죠. 불투명성과 신뢰성 결여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를 공식통계의 무려 5배에 달하는 7조 달러로 추정하면서 숨겨진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와인은 포도를 키우는 토양에 달렸다”는 말처럼, ‘가짜’ 풍토 개선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북한과의 밀무역을 통해 국제적인 북핵 제재조치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중국의 이중성은 새삼 언급할 가치도 없군요.

‘길고 깊게’ 한 우물 파는 일본 특유의 ‘오타쿠’(마니아) 문화도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 세대를 이어가는 일본식 장인정신은 대충 겉치레가 아니라 디테일에 철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요. 끈질긴 노력과 지속적 투자의 결실로 가능한 기초과학 경쟁력과 맥을 같이합니다. 국가와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설정이나 R&D자원 배분 보다는 민간과 학계의 꾸준한 혁신과 창의력이 기본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본이 영국 같다면 한국은 이탈리아 같습니다.” 여러해 전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미국 변호사의 韓日 두 나라에 대한 비교 평가로 기억나는 말입니다. 섬(일본·영국)과 반도(한국·이탈리아)라는 지리적 특성에서부터 음식문화(유럽 국가 중 우리처럼 유독 마늘을 좋아하는 이탈리아인)까지 양국 간 공통점이 많다는 얘긴데, 그가 강조한건 국민적 성향이었죠. 일본·영국이 좀 더 이성적이라면 한국·이탈리아는 더 감성적, 화끈하단 말입니다. 때론 ‘감성의 촛불’도 필요하지만 국가미래를 위해 ‘지성의 횃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격변하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